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강세욱 사업평가관

“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일학습병행제를 평가한 결과, 참여기업 수('17년 1만개)와 같은 양적인 성과 달성에 치우쳐, ‘훈련품질 저하,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중도탈락률 증가, 고용유지효과 저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물량중심이 아닌 효과성에 기반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집단을 특정화할 필요가 있다.

일학습병행제가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고, 능력중심사회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비롯하여, NCS* 기반 자격이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가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표준화한 것. 적합한 직무 능력 개발로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지식·기술·태도 등)을 강화하고, 스펙을 초월한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계획·집행·성과 3단계로 평가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취업 희망 청년층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국가가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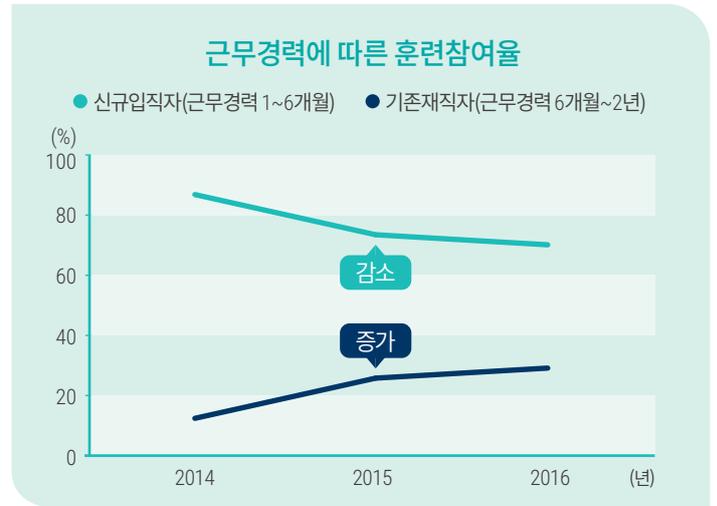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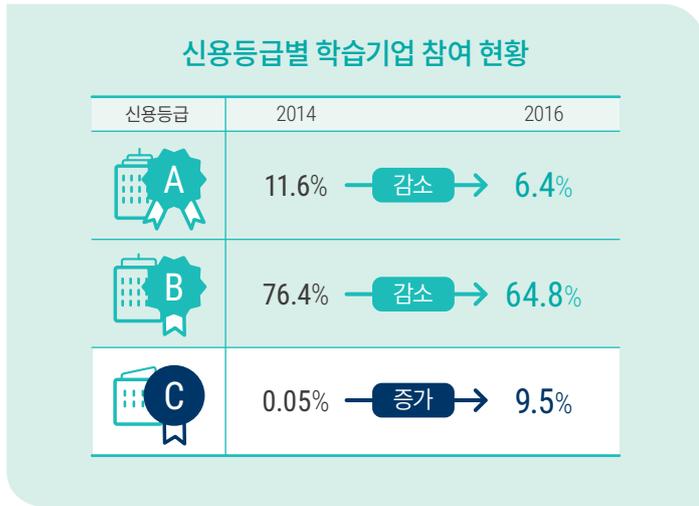
I. 계획단계(적절성 평가)

참여기업 수와 같은 양적 성과목표('14년 1천개, '15년 3천개, '16년 6천개, '17년 1만개)에 치우쳐 훈련품질 저하,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사업 부실화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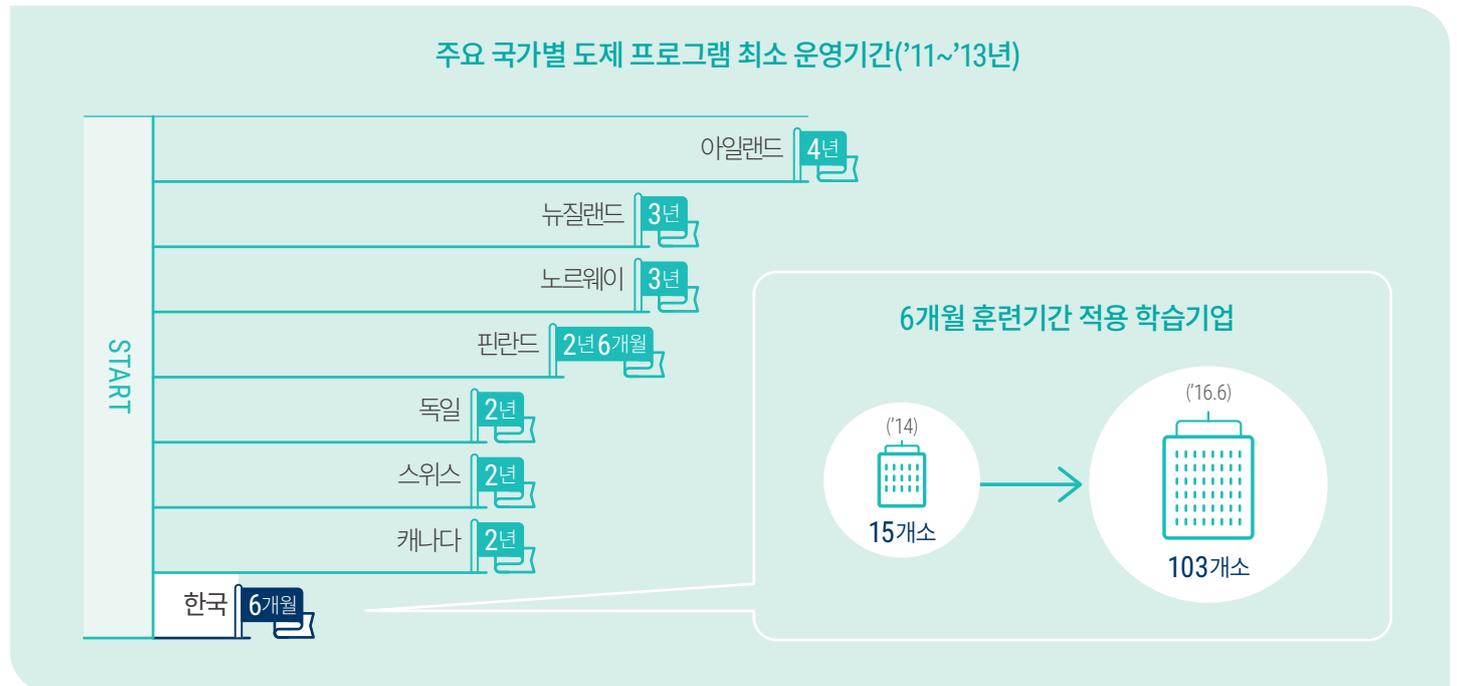
분석 결과

1. 지원 대상기업 요건 완화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C등급 이하)의 사업 참여 비율 증가 → 훈련품질 저하 가능성

2. 참여자의 근무기간 제한 요건 완화로 신규입직자보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기존 재직자의 참여 비율 증가 →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3. 최소훈련기간 단축(1년→6개월) → 주요 국가 도제 프로그램 최소 운영기간(2~4년)보다 짧으며 기존 단기 현장실습과의 차별성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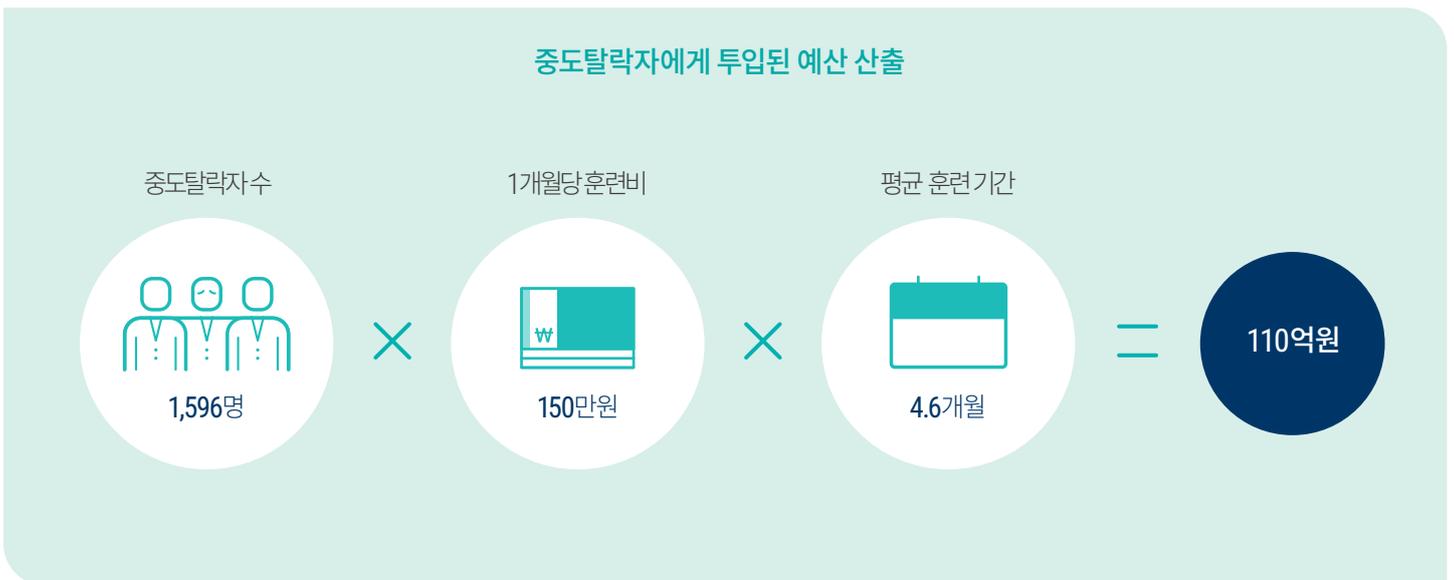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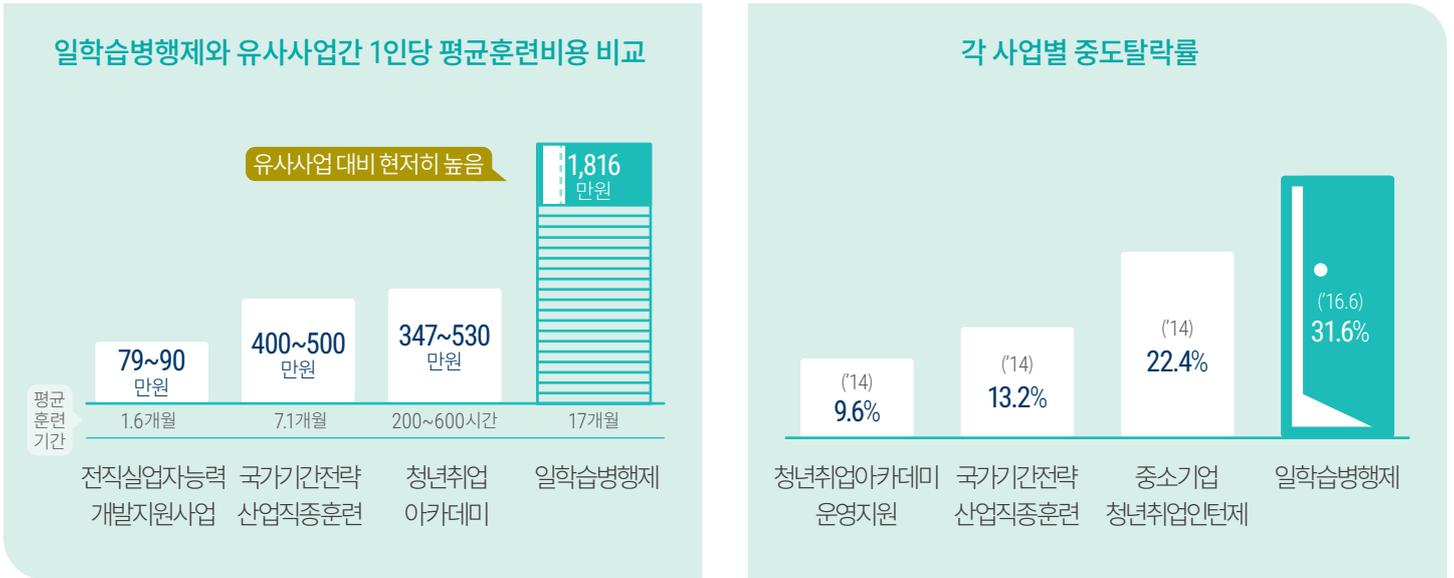
개선방안 양적 성과지표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 취업준비기간 단축 등 본래의 사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 재설계 필요

II. 집행단계(효율성 평가)

일학습병행제는 유사사업 대비 고비용의 훈련임에도 중도탈락자 비율이 높아 예산집행의 비효율 발생

분석 결과

학습근로자에게 투입된 훈련비용은 유사사업보다 현저히 큰 반면, 중도탈락자가 많아 예산 집행의 비효율 발생



개선방안 일학습병행제의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청년층(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targeted approach) 필요

Ⅲ. 성과단계(효과성 평가)

훈련기간 동안 높은 급여를 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를 받으며, 훈련종료 후 대부분이 일반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으나, 훈련종료자의 고용유지효과가 높지 않은 문제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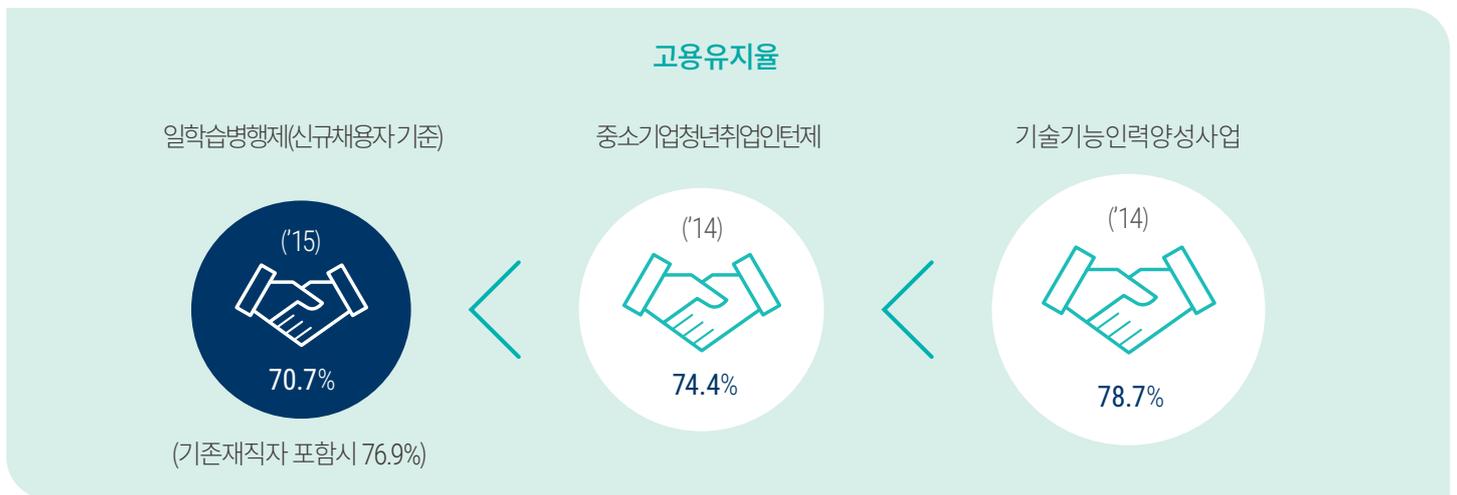
분석 결과

주요 성과



문제점

- 훈련종료자의 고용유지 효과 미흡



개선방안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근거법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NCS기반 자격이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